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국민권익위, '세계 반부패의 날(12.9.)' 맞아 다양한 청렴 행사 열어('23.12.4.)
- ② 국민권익위,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23.12.11.)
- ③ 공정채용 환경조성('23.12.26.)
- ④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23.12.12.)
- ⑤ 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유튜브 공개('23.12.14.)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국민권익위, '세계 반부패의 날(12.9.)' 맞아 다양한 청렴 행사 열어

반부패 주간(12.6.~8.)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공정채용 토크콘서트 등 개최

(‘23. 12. 4.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이번 달 6일부터 8일까지 반부패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청렴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Merida)에서 ‘유엔 반부패 협약’에 서명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세계 반부패의 날을 전후로 반부패 주간을 정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첫날인 6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석해 공익신고자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유공자들이 신고자 보호 경험 사례 등 주요 우수사례를 발표해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고 정부의 신고자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7일에는 한국방송회관에서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총 1,276편의 출품작 중 50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김홍일 전 위원장이 수상자 50명에게 직접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4,11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또 백일장 대상 어린이의 작품 낭독 등 수상 부문별 우수 작품에 대한 영상을 상영했다.

8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대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인 공정채용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정채용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콘서트에는 국민권익위 공정채용 업무담당자,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청년 등 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가해 공정채용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토론했다.

이와 함께 청렴을 주제로 각색한 연극과 팝페라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밖에 정부가 중점 추진한 주요 반부패 실태조사 결과도 국민에게 공개했다.

이번 반부패 주간 행사는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었으며,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전 위원장은 “이번 반부패 주간에 그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주요 반부패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행사를 통해 ‘청렴’과 ‘공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정승윤 부위원장,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반부패 주요 성과 발표

(‘23. 12. 1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이하 UNCAC)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주요 반부패 성과를 공유했다.

190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제10차 UNCAC 당사국 총회에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UNCAC 당사국 총회는 2006년 첫 번째 총회 개최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며 부패예방 및 척결을 위한 노력과 국제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왔다.

우리나라는 2008년 UNCAC 국회 비준 동의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유엔 반부패 협약 개요 >

- 공식 명칭 :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제정 목적 :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
- 당사국 현황 : 190개국 (2023년 10월 10일 기준)
- 협약 서명 : 2003년 12월 10일, 협약 발효 : 2005년 12월 14일
- 국회비준동의 :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는 이날 총회에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립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안내서 발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시 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활용 도입 등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부패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부패 예방, 자산회복, 부패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논의되었으며, ‘부패 척결에 있어서의 책무성 증진’을 주제로 한 ‘애틀랜타 선언문’을 비롯한 다수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호주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오스트리아 연방 반부패국(BAK)** 등과의 양자 회의를 통해 양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 Bundesamt zur Korruptionsprävention und Korruptionsbekämpfung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유엔반부패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보편적 반부패 협약으로 이를 이행하고 다른 당사국들과 반부패 법·제도 개선 등을 공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있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를 국제사회와 논의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공유하는 노력이 국제사회의 부패 예방 및 척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정채용 환경조성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1주년, 공공부문 공정채용 관리체계 확립

(‘23. 12. 26.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국정과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이행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공정채용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올해 1월 1일 출범한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공정채용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신고사건 처리’ 외에도, 사전 예방을 위한 ‘공정채용 제도개선’,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을 새롭게 추진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이후의 사후 적발 및 관리를 위해 연중 ‘신고사건 처리’, ‘채용실태 전수조사’, ‘현안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신고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수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및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총 128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해 116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대비 이첩·송부 건수가 대폭 증가(27건 → 49건)하는 등 국민이 제기한 채용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

구분	접수	처리완료		
		이첩	송부	종결
2022년	53	—	27	31
2023년	128	17	32	67

〈 2023년도 국민권익위 이첩·송부 사건 중 수사·조사 완료 사례 〉

- ① (A기관 사례) ○○ 채용 과정에서 사업부서 팀장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특정 응시생에게 전송하여 면접시험에 있어 채용의 당락에 영향을 미쳐 기관의 채용 공정성이 방해되어 **기소의견 송치**
- ② (B기관 사례) ◇◇ 채용 과정에서 최종 1순위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위원장에게 불합격 처리를 지시하여 위력으로써 채용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한 기관장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 ③ (C기관 사례) □□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공고상 자격 기준에 충족하는 응시자를 부당하게 ‘응시 자격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한 채용 담당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한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25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다.

〈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적발내역 건수 〉



또한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비리 의혹 해소를 위한 ‘현안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국민 신뢰와 채용 공정성 강화를 도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채용비리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채용규정 미숙지와 자체 채용규정 흠결에 의한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을 실시했다.

‘제도개선’으로는,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규모가 ’ 20년 기준 약 43만명임에도,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채용비리가 빈발함에 따라, 공정채용 기준(31개 조문)을 마련해 전체 행정기관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하도록 지난 3월 15일 제도개선 권고했다.

제도개선 이행점검 결과 550개 기관 중 401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기준을 70% 이상 반영하는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채용 전문교육’은 공직유관단체 인사·감사담당자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과정(7월 신설)을 센터 주관으로 운영했으며, 907개 기관 인사·감사 담당자 5,066명이 이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이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757명 중 684명(90%)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는 등 채용 전문성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규정 컨설팅’은 기관별로 채용규정을 제출받아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규정된 공정채용 절차를 반영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올해 354개 공직유관단체에 총 8,485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가 빈발한 항목으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35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3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30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관문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불공정을 겪지 않도록,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관리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 등 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 중복지원 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제도개선 권고

(‘23. 12. 12. 국민권익위)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B기업의 공장을 구입해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활용했다.

C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아 산업센터내 2개호실을 취득한 후 그 중 1개실을 매도해 3억여 원의 매매 차액을 실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융자금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책융자금을 조기 환수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특정 소수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에 반해,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동일사업에는 겹치기식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 정책융자금 지원한도를 설정하며 ▲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정책융자금 조성 주체인 지자체가 은행에 책임을 미뤄 관리·점검을 소홀히 함에 따라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기업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기업이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이 유지된 사례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하고 관리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점검 시 목적외 사용 여부와 자격유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부모 회사의 공장과 부지 매입을 지자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구입(우회 증여)
 - A기업의 대표이사인 甲은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도로부터 융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자기 부친이 소유한 B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해 특수관계인(부녀) 간 우회 증여
- 지원받은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에 악용
 - ○○도 융자금 지원기업에 선정된 A기업은 공장매입 명목으로 0.3%의 장애인기업 추가금리 혜택 조건의 2,980백만원을 지원받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B기업과 임대차 계약(보증금 13,000만원, 월세 1,300만원)을 체결
- 정책자금으로 매입한 공장을 매도하는 목적외 사용으로 매매차익 실현
 - A기업은 ○○도로부터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00백만원을 지원받아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취득한 후 그 중 1개 호실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322백만원의 매매차익 실현
- 정책자금으로 신축한 공장을 카페로 임대운영
 - A기업은 ○○도로부터 융자지원대상에 선정되어 공장신축 명목으로 1,000백만 원을 지원받아 건물을 짓고 乙과 계약기간 20년에 이르는 경영위탁계약[월세는 매출의 20%(최소 월750만원 보장)]을 체결하여 현재 임차인(乙)이 카페로 운영
-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 지자체 내 기금 간 중복지원
 - 운전자금 명목으로 △△도로부터 각각 '농어촌진흥기금' 200백만원을 지원 받은 A기업과 B기업은 같은 기간 중 똑같은 사업 내용으로 이번에는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대상기업에 선정됐 각각 A는 410백만원을, B는 500백만원을 추가 융자받음
- 우대금리 조건 상실했음에도 혜택 유지
 - A기업은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도로부터 2015년 이차보전금리 0.3%의 추가 지원조건으로 총10억원의 자금을 융자지원 받았으나, 이후 대표이사를 남성으로 변경하고도, 현재까지 추가금리 혜택을 부여받음

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유튜브 공개

-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용 시트콤·브이로그·단막영상 총 10편 제작
-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시청 가능

(‘23. 12. 14. 국민권익위)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등 청렴 교육 영상콘텐츠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시트콤, 브이로그, 단막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청렴 교육용 영상 콘텐츠 10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는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가족 시트콤이다.

시트콤은 ▲1화 박청렴(아빠)의 인사 청탁 ▲2화 박순수(딸)의 출석·학점 변경 청탁 ▲3화 정결백(엄마)의 공공휴양림 시설 사적 이용을 주제로 각각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특히 2화에서는 아이돌 그룹 <하이큐티>의 황윤정 씨가 잘생긴 남학생(오미남)에 반해 출석 변경을 청탁하는 주인공 박순수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브이로그 「매너가 오피스를 만든다」*는 외모 지적, 비인격적 대우, 퇴근 후 업무지시 등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조직 내 소통과 존중 문화를 확산하자는 교훈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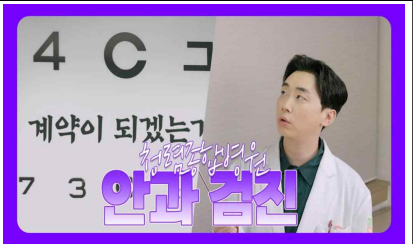
* (1화) 회의에 대한 회의, (2화) 이심점심, (3화) 회식 분투기

「청렴종합병원」*은 최근의 청탁금지법 위반 판례를 짧고 재미있는 단막영상으로 각색해 법의 핵심내용을 알려준다.

- * (1화) 금품 해당 여부 사례 「초음파 검진」, (2화) 계약 청탁 사례 「안과 검진」, (3화) 인사 청탁 사례 「이비인후과 검진」, (4화) 금품 수수 주체 사례 「엑스레이 검진」

청탁받은 상황이 병원 건강검진 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로 개그맨 출신 인기 유튜버 김두현 씨가 의사로 출연한다.

< 청렴교육 영상 콘텐츠 >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매너가 오피스를 만든다	청렴종합병원

청렴연수원은 유튜브 댓글 달기와 소문내기에 적극 참여한 100명을 선정해 커피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딱딱한 법령 대신 흥미로운 청렴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재미있게 시청하며 청렴·공정·배려 등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